
 국토교통부	<h1>보도해명자료</h1>		<small>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</small>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
	배포일시	2017. 12. 26(화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도시재생사업 기획단 지원정책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박준형, 사무관 김동혁 • ☎ (044) 201-4912
보도일시		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50조 도시재생, 거물 정치인들 '나눠먹기 판' 보도 관련

-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거물급 다선의원 '나눠먹기'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.

- 이번 시범사업 평가 및 선정은 공정성·투명성·객관성을 제1원칙으로 진행하였습니다.
 - 중앙 선정 사업지(공공기관 제안 사업지를 포함)의 경우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평가위원회(민간인만으로 19명)를 구성하였으며,
 - 가이드라인으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고, 이에 따라 3단계 평가(서면-현장-발표)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였으며,
 - 특히 마지막 발표평가 때는 신청기관 관계자는 물론 주민대표까지 모든 사업(40곳)의 평가과정을 참관하도록 공개적으로 운영하여
 참석자들이 개별 사업계획의 내용을 상호 비교하고 평가위원의 평가의견을 공유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.
 - * 광역지자체 선정 사업지의 경우도 16개 광역지자체가 민간전문가로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일하게 3단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를 진행

- 또한, 평가의 공정성과 사업의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단(민간인만으로 9명)의 검증을 거쳤으며,

- 최종적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(30명, 위원장: 국무총리)의 심의·의결을 통해 사업을 선정(24곳)하였음.
- 한편, 중앙정부가 선정한 사업들이 사업비가 크고, 특히 공공기관 제안 방식 사업의 사업비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,
 - 중앙정부 선정 사업(24곳)의 사업면적*이 광역지자체 선정 사업(44곳)의 사업면적** 보다 크고, 공공기관 제안 방식의 경우에는 사업비에 공기업 투자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
 - * 경제기반형·중심시가지형, 20~50만㎡, 국비지원액 150~250억원 내외
 - ** 일반근린형·주거지지원형·우리동네살리기, 5~15만㎡, 국비지원액 50~100억원 내외
 - 아울러,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비는 신청기관이 제시한 구상단계의 추정치에 불과하며, 구체적 사업계획 및 국비(50~250억원 내외) 등의 국가지원사항은 추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.
- 금년 뉴딜사업은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 등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등 준비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하고자 하였습니다.
 - 따라서, 지난 수년간의 준비를 통해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에 특화된 자산을 활용하는 계획을 제시한 지자체들의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.

< 보도내용 (12.25, 매일경제 종합2면) >

◆ 50조 도시재생, 거물 정치인들‘나눠먹기 판’

- 사업비 커 알짜로 꼽히는 정부선정 15곳 중 10곳이 거물급 다선의원 지역구
- 성급한 사업추진에 ... 재생 필요성 우선순위보다 정치권 배분만 신경 쓴 흔적



이 보도해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지원정책과 김동혁 사무관(☎ 044-201-491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